

“5·18 가짜뉴스 확대·재생산 여전”

신군부 대응논리 악용...민언련, 방통위 심의 요청 기념재단, 왜곡방송·가짜뉴스 모니터링 결과 발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가짜뉴스가 확대·재생산되고 있어 역사왜곡 근절을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가짜뉴스가 5·18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과 신군부의 대응논리로 확대되고 있어 시민들의 신중한 접근이 절실한 실정이다.

5·18기념재단과 민주언론시민연합은 3일 기념재단 고백과 증언센터에서 ‘5·18민주화운동 왜곡방송·가짜뉴스 모니터링 결과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한 모니터링 결과는 지난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언련과 기념재단이 5·18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운영, 분석한 결과다.

보고회에서 발제한 유민지 민언련 운영팀장은 5·18 가짜뉴스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팀장이 지적한 5·18 가짜뉴스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특혜·확대설 ▲유공자 명단 비공개 ▲5·18계엄군 성폭력 왜곡 ▲헬기사격 부인 ▲북한군 개입설 ▲광주시민의 폭력시위에 따른 비상계엄령 정당화 등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이렇게 퍼진 가짜뉴스는 국가기관이 검증한 역사를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5·18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과

신군부의 대응논리를 확대하는데 악용되고 있다.

유 팀장은 “국가유공자 가산점은 5·18 민주유공자뿐 아니라 독립·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고엽제 피해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유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고, 5·18유공자는 전체 유공자의 0.5%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5·18유공자 숫자도 지난 2014년 1월 4,250명에서 지난해 1월

기준 4,248명으로 줄고 있고, 모든 유공자의 개인정보 공개부분에 대해서도 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보도와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 ‘헬기사격’과 ‘계엄군의 성폭력’도 지만원씨의 시스템클럽과 뉴스타운 등지에서 왜곡되고 있다”면서 “문제는 이곳에서 시작된 가짜뉴스가 블로그·유튜브 계정 등 SNS를 통해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지난달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가짜뉴스 142건을 심의해줄 것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

다.

일부 종합편성채널이 5·18을 왜곡하거나 관련 보도를 다루지 않는 행태도 지적됐다. 민언련은 시민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꾸려 중편의 왜곡보도에 대한 제재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유 팀장은 “5·18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학계와 언론계의 역할뿐 아니라 시민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5·18을 왜곡하는 게시물을 볼 경우 주소를 복사해 통신심의를 요청하는 과정이 간단하다. 많은 시민들이 가짜뉴스를 가릴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 왜곡과 편견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중찬 기자



3일 오후 광주 5·18기념재단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왜곡방송 및 가짜뉴스 모니터링 결과보고회’에서 유민지 민주언론시민연합 부장이 가짜뉴스가 확대·재생산되고 있어 역사 왜곡 근절을 위한 언론계·학계 등 각계 각층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윤장현, 사기범 자녀 채용비리 연루 의혹 공기업·사립학교 취업 개입정황...피의자 신분 전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40대 여성에게 4억5,000만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사기범의 아들과 딸 취업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선 윤 전 시장이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사기범에게 돈을 건넨 부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피의자로 입건했다. 당초 사기 피해자 신분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것이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윤 전 시장이 자신에게 사기행각을 벌인 A씨(49) 자녀들의 채용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아들이 광주시의 산하 기관에, 딸은 광주지역 모 사립학교에 기간제교사로 각각 취업한 것을 확인

했다. 경찰은 이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30일 산하기관과 학교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한 뒤 컴퓨터와 관련서류 등을 분석했다.

경찰은 윤 전 시장이 A씨에게 돈을 입금한 시점과 자녀들의 취업시기가 비슷한 점에 주목, 관련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4억5,000만원을 A씨에게 송금했으며 A씨의 자녀 1명도 올해 1월 사립학교 기간제교사로 채용됐다.

경찰도 사기 피해자였던 윤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 달 30일까지 검찰 출석을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아 오는 5일 오전 10시까지 재소환을 통보했다. /고광민 기자

60세 한국인 남은 평균 수명 25.1년

통계청 생명표 조사

한국인 60세 남성의 남은 평균 수명이 10년전 보다 3년 가까이 늘어났다. 또 모든 연령층에서 생존 확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3일 통계청이 공개한 ‘2017년 생명표’를 보면 작년 기준 60세인 한국인의 기대여명(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은 25.1년으로 10년 전보다 2.7년 길어졌다.

2017년 기준 60세의 기대여명은 남성이 22.8년이고 여성이 27.4년이였다. 10년 전보다 각각 2.8년, 2.7년 늘었다. /송수명 기자

2016년 기준 60세 한국인의 기대여명과 비교하면 남성은 0.3년, 여성은 0.2년 증가했다. 40세 한국인의 기대여명은 43.6년(남성 40.7년·여성 46.5년)으로 10년 전보다 3.2년(남성 3.5년·여성 2.9년) 늘었다.

9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 남녀의 작년 기준 기대여명은 2016년보다 늘었다.

20년 전인 1997년에는 한국 65세의 기대여명이 OECD 평균보다 남성 1.2년, 여성 0.9년 짧았으나 고령층 기대여명이 OECD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결과라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송수명 기자

전남도교육청 조직개편안 의회 문턱서 ‘제동’

도의회 “주요 의사결정 절차적 정당성 부족”

갈등과 반목을 겪고 간신히 노조 동의를 얻은 전남도교육청 조직개편안이 이번에는 의회 문턱에서 제동이 걸렸다.

3일 전남도의회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우승희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도교육청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의 의회제출 동의를 거부했다.

의회 회의규칙상 의안은 회기 10일 전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가 지나간 뒤에 제출하려면 상임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미 도의회 회기가 시작된 상황에서 도교육청은 입법예고, 노조와 협의를 거쳐 서둘러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려 했지만, 상임위원장의 거부로 심의

조직 받을 수 없게 됐다.

추진단계에서부터 일반직을 중심으로 한 반발이 강했고, 의견상합이었던고는 하지만 입법예고기간이 통상(20일)에 못 미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소홀했다는 게 이유다.

조직개편안 제출 부동의는 주민 직선 3기 장석웅 교육감 취임 후 업무추진 과정 전반을 돌아보라는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고교 신입생 교과서 구매

비를 지원하는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뒤늦게 조례를 손본 것으로 알려졌다. 중학교 무상교복도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

우 위원장은 “도교육청은 방향이 맞으니 동의해달라는 일방적 사고보다는 중요한 정책일수록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워 치밀하게 추진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미애 기자

집단폭행에 보복 행위까지

○...술값을 달...
○...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모씨(33) 등은 이날 새벽 4시께 서구 치평동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종업원 이 모씨(28)가 미결제 금액을 계산해 달라고 하자 “니

가 뭘대 분위기를 깨냐”며 4명이 달려들어 집단 폭행하고, 경찰 조사 뒤 다시 주점을 찾아가 유리잔을 던지는 등 보복행위를 한 것.

○...이를 조사하던 경찰은 “계산해야 할 금액이 있으면 당연히 돈을 받으러 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주점을 다시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악질적인 놈들이다”고 혀를 끝끝. /김중찬 기자

SUNLAKE VILL 전원마을 조성단지

서울터건축사사무소(주)

전원주택, 부지 매매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번지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전원주택 허가 취득
- 매매 - 상담후 결정
- 주인직매. 010-2680-9685